'외국인 인권' 안중에도 없는 여수출입국사무소

고용주 말만듣고 막무가내 강제출국 조치 법원 "사실 확인 업무 소홀" 잇따라 제동

정당한 체류 권한이 있는 외국인을 보호 해야할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는 커녕 소홀한 업무 처리로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주가 제 출한 문서나 의견 등 형식적 검사에만 치 중,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허가를 잇따라 취소하고 강제출국 조치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일고 있다.

28일 여수출입국사무소 등에 따르면 베트 남 국적 V(40)씨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로부터 체류 허가를 취소당한 것은 지난해 11월께다. 지난해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가 '9월 30일까지 여수출입국사무소에 V씨가 출석하지 않으면 체류허가가 취소된다'는 내 용의 공고문을 낸 뒤, 정해진 기한 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였다. 앞서 V씨의 고용주는 9월초 여수출입

국사무소에 'V씨가 사업장을 무단 이탈했 다'며 고용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를

V씨는 여수출입국관리소의 편의적인

행정에 반발했다. 양측의 충분한 조사를 통한 조치가 아닌, 한국인 고용주의 일방 적인 말만 믿고 체류 허가를 취소했다는 주장을 폈다. V씨는 지난해 8월 여수의 한 회사에서 일하던 중 동료로부터 폭행을 당 한 뒤 퇴사 신청을 했지만 회사 측은 '3년 간 근무하기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퇴직 처리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V씨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자 회사는 고용 외국 인 변동사유가 발생했다고 출입국관리사

무소에 신고했다는 것이다.

V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여수 출입국사무소가 사실확인 절차 없이 고용 주의 말만 믿고 체류 허가를 취소한데다 당사자(나의) 연락처를 알 수 있었지만 직 접 알리지 않고 공고문을 냈다"며 지난 1 월 광주지방법원에 강제퇴거명령 취소 소 송을 냈다. 법원은 V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고용변동 신고의 정당성에 대한 심 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출석을 (제 대로) 요구한 뒤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 차가 없었다. 이는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 라며 V씨의 체류 허가를 취소한 여수출입 국관리소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뿐 아니다.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해 8월에도 한글도 읽지 못하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에게 한글로 된 '사업장 변 경 사유 확인서'에 서명하게 한 뒤 이를 제 출한 고용주의 말을 믿고 체류허가를 취소 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지난 2012년 4월 여수시 중흥동의 플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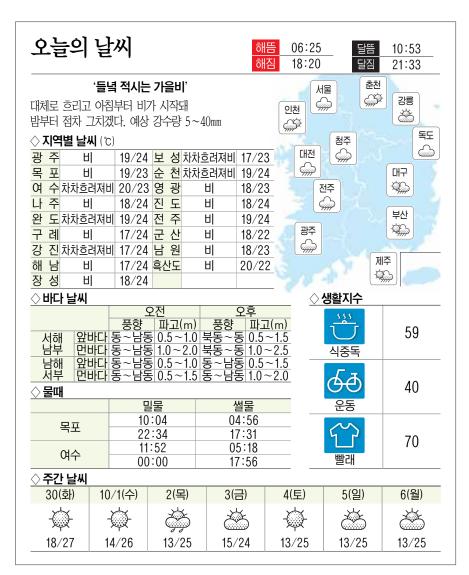
스틱원료 제조업체에서 B(44)씨는 지게차 운전 도중 부상을 입고 6개월간 치료를 받 았다. 고용주는 10월 12일 한글도 읽지 못 하는 B씨에게 '근로자 태업·무단결근으 로 인해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사업장 변경 사유 확인서에 서명하게 한 뒤 이를 여수고용노동지청에 제출했다.

여수출입국사무소는 '근로계약이 종료 된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사업장 변경 신청 (재 취업후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B 씨의 체류허가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번에도 여수출입국사무소의 체류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봤다.

한글도 모르는 B씨가 제대로 모르고 사 업장 변경사유확인서(근로 계약 해지서)에 서명했다고 본 것이다. 한편 지난 2005년 에는 중국인 이모씨가 '외부 의료조치가 필 요함에도 여수사무소가 출국할 것만을 강 요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 한바있다. / 백희준기자 bhj@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어린이에게 무한 사랑을…

광주시 가정어린이집(회장·문순정)보육 교직원 1500여명은 지난 27일 호남대학교 체육관에서 어린이들에게 무한사랑을 다짐하는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2기 출신 법조인 45명 불과…전국 평균에도 못미쳐

전남대 로스쿨 취업률 '저조'

전남대 로스쿨 학생들의 취업률이 전 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등 전국 로스쿨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 쿨 졸업 뒤 법조인으로 취업하는 경우도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28일 교육부 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로스쿨 2기 정원 대비 취업률' 자료에 따르면 전남대 로 스쿨(법학전문대학원) 2기(정원 120명) 중 취업자 비율은 54.2%(65명)로, 제주 대 로스쿨(50.0%), 동아대 로스쿨(52. 5%) 다음으로 전국 25개 로스쿨 중 3번 째로 낮았다. 전국 25개 로스쿨 2기 평균

정원 대비 취업률(66.3%)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국 로스쿨 졸업생 중 법조인이 되는 경우도 평균 42%에 불과, 다양한 경력의 법조인 양성을 목 표로 한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전남대의 경우 2기 취업자(65명) 중 법조인이 된 졸업생들은 45명(37.5%)에 불과했다. 경희대(60%), 부산대(52. 5%), 중앙대(52.5%), 인하대(50.0%) 등 의 순으로 법조인으로 취업 비중이 높았 다. 서울대는 48%에 머물렀다.

/김지을기자 dok2000@

자녀 상습학대 부모 친권상실 …최고 무기징역

'아동특례법' 오늘부터 시행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학 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 례법)이 29일 시행된다.

의붓딸에게 뜨거운 물을 붓는 등 학대 행위를 일삼고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울 산 계모 아동학대 사건'이 계기가 돼 제정

된 특례법은 학대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 하기 위한 법제적 장치를 개선했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 아동에 대 한 신속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28일 법무부와 법원에 따르면 특례법에 는 아동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죄(아

동학대치사)와 학대 행위로 아동을 크게 다치게 한 죄(아동학대중상해)에 대한 처 벌 규정을 신설했다. 아동학대치사 범죄 자의 경우 5년 이상 또는 무기의 징역에 처 한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해 중상해를 입 히거나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 검찰

이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고 의무도 강화 된다.

특례법은 누구든 범죄 발생시 뿐 아니라 아동이 학대당하고 있다는 의혹이 들기만 해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정했다.가정위탁지원센터 등 아동보호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아동 학대범죄의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를 정 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시행령에 따라 15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 도록 했다. 법원에서는 아동학대범죄 일 부를 '아동보호사건'으로 따로 분류해 심 리·처분한다. /연합뉴스

광주 숭덕고 내년 신입생부터 일반고 전환

시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

광주 숭덕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 (자사고) 지정이 취소됨에 따라 내년 신 입생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광주시교육청은 숭덕고의 자사고 지 정 취소 신청을 승인함에 따라 2015학년 도 신입생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고 28 일 밝혔다.

숭덕고는 지난 2010년 4월 자사고로 지정된 이후 2011년부터 최근 4년간 자 사고로 운영됐고, 내년 평가를 앞두고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숭덕고의 일반고 전 환으로 우수학생들이 일반고에 고르게 배치돼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

